

내 땅 내 나라

미군 공여지 피해주민 소송 움직임... 국회도 대응채비

미군 공여지문제(〈한겨레21〉 111호 참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0년 동안 자신의 땅이 미군의 공여지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다 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동두천의 국제 케미컬사 상무와 쇠목마을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이하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전국적인 공여지 실태의 공개와 사유지가 포함된 공여지의 보상·반환, 주한미군기지의 이전·반환, 그리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하 '주둔군협정')의 전면개정을 위한 대중운동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15대 국회는 공여지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국회가 될 전망이다.

운동본부 법률구조센터 마련

동두천 주민들의 의뢰로 소송(전용사용권 부존재 확인의 소)을 준비중인 김기중(32) 변호사는 "다른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문제된 토지들

이 미군 공여지에 포함돼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둔군협정을 체결할 66년 당시 아무런 보상절차 없이 공여지로 결정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국가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용사용권을 행사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미군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주둔군협정이 미군 상대의 민사소송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해놓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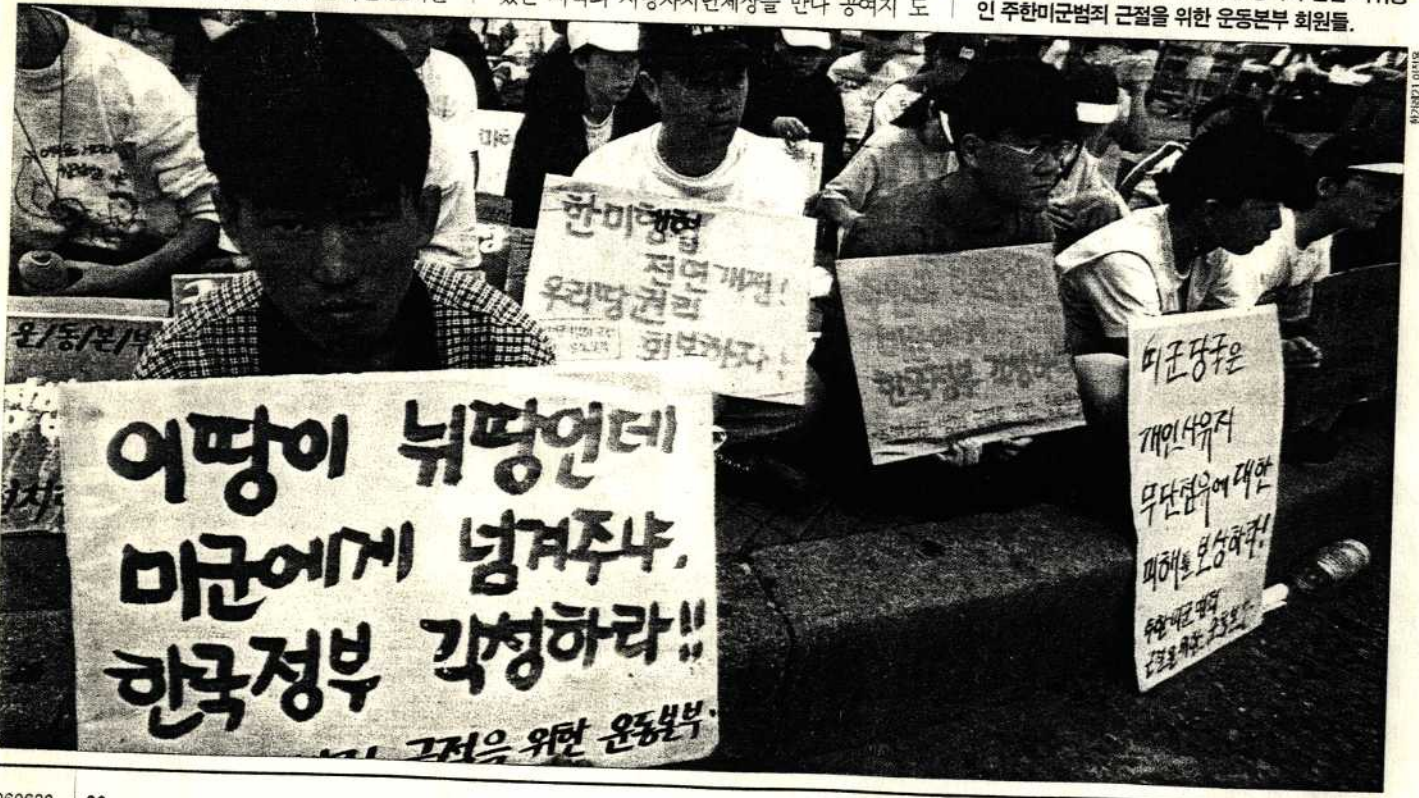
공여지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운동본부에서는 이 문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공여지가 확인되면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센터를 마련했다. 운동본부 서울 사무실(02-744-1211)은 중앙센터로서의 구실을 할 예정이고, 지방에도 이를 마련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국방부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땅이 공여지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공여지 도

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또 50여년 동안 미군기지 철수 운동을 벌이며 공여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일본의 오키나와와 국제적인 연대도 시도할 계획이다. "최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 때문에 처음에는 연대에 대해 꺼렸는데 그쪽에 알아보니 군국주의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빠르면 7월 초 오키나와를 방문해 오타 지사를 만날 생각이다. 가능하면 국내에 초청해 조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면담을 주선해 미군기지 문제 해결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게 할 예정"이라는 게 운동본부 조재학 사무국장이 밝히는 연대활동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14대 국회 내내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15대에서도 국방위에 소속될 임복진(국민회의·광주 남구) 의원은 "미군 공여지문제는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기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의 기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추적해 비정상적인 현실을 하루빨리 되돌려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원 말고도 국방위를 희망하는 야당 의원들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15대 국회에서는 공여지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들에도 아랑곳없이 사건 해결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여전히 꿀떡은 뱉어리다.

공여지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론 접촉을 피한

6월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시위중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



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국방부는 적극적인 공여지 실태에 대한 공개나 해결방안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주둔군협정에 따라 시설과 구역의 문제를 다루는 한미합동위원회 시설·구역분과 위원회에 한국측 대표로 참가하는 국방부 시설국장(손문성 소장)과 관제보상과장(노양우)은 전화 인터뷰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 공여지 실태 공개를 촉구하며 운동본부 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가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으로 공여지 내 사유지를 완전히 보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문제가 있음을 직접 시인했다. 또 이 답변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5년 내에는 사유지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혀 공여지 안 사유지의 전국적인 규모가 상당하며 그 보상 또한 간단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 국방부 당국자는 "미군측은 국방부가 요구하는 공여지 반환에 대해 '신무기체계'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미 확보한 땅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미군측의 태도가 협상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고백했다.

국방부 "미군이 땅 안 내놓는다" 태도 소극적

주둔군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무부족도 공여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대해 별다른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협정문안 중 공여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설과 구역 조항(제2조~제5조)에 대한 개정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편 운동본부를 비롯한 민주단체들은 공여지 문제와 함께 미군기지의 반환문제와 기지에서 파생하는 환경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이 모든 문제들을 포괄하면서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15대 국회개원과 함께 지난해 7만여명에게 받은 협정 개정안으로 국회청원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또 오는 6월24일에는 용산구 민회관에서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토론회'를 마련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용산기지의 여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비롯해 노동, 환경, 여성, 종교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와 함께 부산, 대구, 인천, 의정부, 평택, 군산, 동두천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들의 공여지와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이제 서서히 침묵의 늪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27

김창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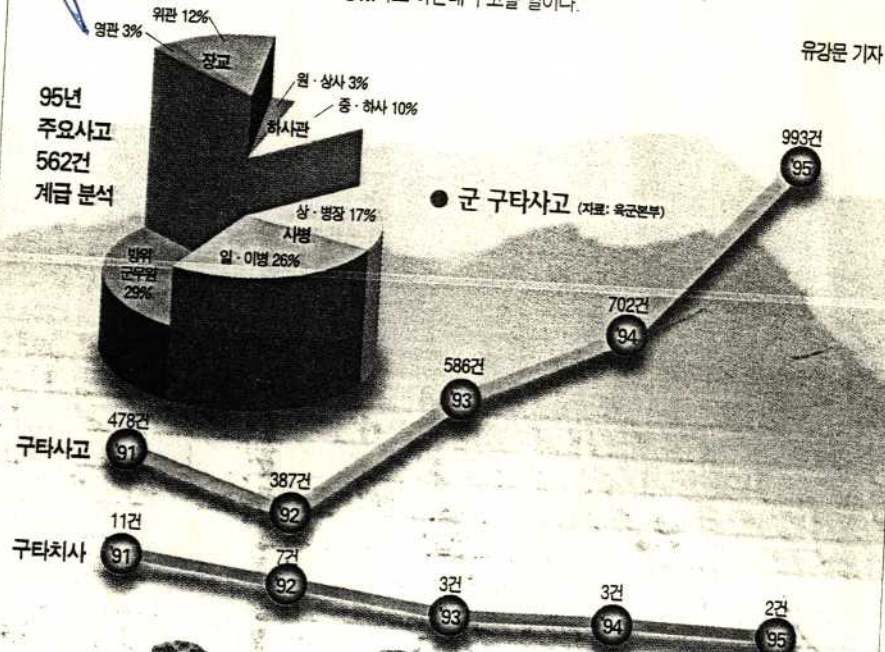
지표뉴스

여전히 계급이 강패?

군 구타사고 다시 고개... 장교의 구타 전년 대비 38건 늘어

오즘 군대 참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자기는 군학발에 정강이를 끼이고 철모로 뒤통수를 얻어맞으며 군대생활을 보냈는데, 오즘 군대에서는 이런 구타가 사라졌다는 사심이다. 앞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만 만나면 이런 말을 해줘야 할 것 같다. "옛날 군대가 더 좋았지."

육군본부가 최근 발표한 91~95년 범죄통계를 보면 구타로 인한 사고가 92년 한해만 전년에 비해 줄었을 뿐 계속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91년 4백78건이던 구타사고가 92년 3백87건으로 줄더니, 93년 5백86건, 94년 7백22건, 95년 9백93건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에 2.7건의 구타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구타의 강도는 줄었는지 구타로 인한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11건에서 7건, 3건, 3건, 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구타사고의 내용을 계급별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육군이 지난해 발생한 구타사고 가운데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류한 5백62건 가운데 장교가 저지른 것이 89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하사관의 구타가 72건으로 13%를 차지한 것에 비추면, 역시 군대에선 계급 높은 사람이 무서운가 보다. 장교의 구타사고는 전년에 비해 무려 38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의 분석은 이렇다. "군의 초급간부들이 대부분 사병들과 나이가 비슷해 효과적으로 지휘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올해를 창군 이후 가장 인명피해가 적은 해로 정했다고 하는데 두고볼 일이다.



동두천 식목마을 사태 등을 통해서 본 미군 공여지의 문제점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I. 미군 공여지(供與地) 란?

‘미군 공여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에 있어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양도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미군 공여지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서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되며, 미군 공여지는 다음에서 보듯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미군 공여지
 - ① 전용 공여지 :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땅
(예: 미군 기지, 훈련장, 기타시설 등)
* 현재 미군기지만 전국 98개소에 면적 1억평
 - ② 지역 공여지 : 원래의 토지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땅으로 일종의 그린벨트 개념
(예: 미군의 사격 훈련장 안전지대, 미군 송유관, 수도관, 전선 및 기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확보한 땅)
 - ③ 임시 공여지 :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

최근에 미군 공여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미군기지밖에 존재하는 미군 공여지 실태가 일부 공개되면서 부터다. 그동안 국민들은 미군기지에 대해서만 인식했지 미군기지 외에 미군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지, 그리고 미군 공여지의 개념조차도 몰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두천 쇠막 마을은 바로 미군 공여지로서, 쇠막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에게 사용권이 넘겨진 지 모르고 수십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미군기지 외의 미군 공여지가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동두천 쇠막 마을의 주민들이 그러했듯이 엄연히 국민들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이라는 것이다. 즉 국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행정협정을 통해 미군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다. 즉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내법과 미군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상호 대립,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 조항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서 개인사유지를 징발하는 경우 적법한 법률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유지가 미군 공여지로 양도된 경우의 상당수는 1) 적법한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2) 아무런 소유주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3) 땅 소유주와 해당 관청이 공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 동두천 쇠막 마을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 미군 공여지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한국정부의 국유지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II. 미군 공여지의 문제점

1)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현행 징발법도 이같은 취지를 살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징발하는 경우에도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상황 등에 의해서만, 그것도 징발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두천 쇠목마을의 경우 지난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 당시 미군 공여지로 양도하면서 대상 주민들에 대한 통고나 사전협의 일체없이 그리고 배상금 한푼 주지 않고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토지의 사용권을 미군에게 넘겨준 것이다. 더구나 당시의 상황이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 이자 '기본권 침해' 이다.

2)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도시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시 전체면적의 51%인 약 1천 5백만평(미군기지는 250만평)이 미군 공여지여서, 주민들의 생활터전의 상당수가 미군 공여지로 묶여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도시발전은 물론 사유지에 대한 건축과 시설보수 등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시의 공식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다가도 미군측이 항의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야 하고, 미군의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이 원래 설계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지어지는 경우 등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뒤의 사례에 나올 국제 케미칼 공장, 동두천시 생연동의 3층 건물이 그 예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군기지 이외의 미군 공여지가 과연 동두천에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동두천을 비롯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원주, 춘천 등 전국 98개 지역에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전국적으로 미군 공여지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미군 공여지 문제는 결코 동두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3) 미군 공여지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당신의 소유인 집과 토지가 '미군의 땅' 인 미군 공여지일 수 있다! -

동두천에서 미군 공여지의 실태가 공개된 것도 95년 국제 케미칼 공장 건설과 96년 쇠목 마을 미8군 사격장 확장 계획 등을 통해서 최근에 들어와서다. 동두천시의 경우 최근까지 미군 공여지의 면적, 분포, 위치 심지어는 미군 공여지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가 위의 사건들을 통해서 국방부에 문의한 후에야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즉 미군 공여지의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 수십 년동안 주민들의 땅이 미군에게 공여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만큼의 미군 공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분포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신들의 땅이 미군 공여지 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마련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동두천 쇠목마을 처럼 어느날 갑자기 미군들이 "미군 공여지니까 나가라!" 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4)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 한미행정협정은 1967년 협정 발효직전까지 미군이 불법 점유한 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함 -

주한미군이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미행정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은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의해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미군 기지와 공여지 조성은 1945-48년 미군정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정 시대에는 미군은 '점령군'의 지위를 가지고 일체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했으며,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그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일시 철수했던 미군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되자 다시 들어왔고, 이때 한국정부로부터 '군작전지휘권'을 포함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면서 1967년 한미행정협정 발효 직전까지 미군기지에 관한 한미간의 조약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개인 사유지 등 엄청난 땅을 불법적으로 수용하여 현재와 같은 엄청난 미군 공여지를 확장시켰다.

주한미군은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67년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기지에 방대한 규모의 기지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계약이 있어야만 했으나, 한미행정협정 제2조는 1967년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권을 '소급' 인정해 버렸다. 즉 미군이 1945년 점령군으로 38선이남에 진주한 이래 일본군 무장해제과정에서 무상으로 접수했던 모든 기지와 시설, 한국전쟁 와중에서 극도로 불평등하게 체결된 대정협정, 마이어협정에 의해 1966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13년동안 징발했던 모든 미군기지와 시설에 대한 사용권이 별도의 '협의절차없이' 인정된 것이다.

이 조항의 규정은 협정 제2조 1항 (가)에 의하여 미군이 기지를 사용함에 있어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한다'는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1.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보충 설명)

<공여지 반환에 따른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 사유재산권이 침해된 공여지를 돌려받으려 해도 현행 한미행정협정으로는 불가능하다 -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미군 공여지로 인한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유재산을 공여지화 한 토지를 돌려받으려 해도 미군당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이다.

한미행정협정 제 2조 3항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같이 반환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미군이 기지를 반환할 때는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규정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렇싸

하다. 그러나 <미군이 기지 반환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동조항에 따르면 미군이 필요없게 된 기지라고 하더라도 한국측에서 아무리 반환을 요구해도 미군이 수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반환여부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땅을 빌려주고도 돌려받는 것이 우리의 의사가 아니라 미군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이 얼마나 치욕적인 내용인가? <미일협정의 경우 미군의 기지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소멸되면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규정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반환하지 않는 땅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다음은 그 한가지 사례다.

'부천속의 작은 미국' 으로 일컬어진 부천시 오정동 미44공병대대는 54년 7월 오정동에 첫발을 디딘 이래 38년간 주둔해 오다 92년 9월 30일 파주군 봉일천 일대로 이전을 끝마쳤다.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공간이 부족한 부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44공병대대 부지는 부대가 옮겨감과 동시에 시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미44공병대대 부지 13만평의 사용권은 부대 이전과 관계없이 여전히 미군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관계자는 "미44공병대대 부지의 사용권은 미44공병대대"라고 밝히고 "미군이 스스로 반환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44공병대대 부지 13만평은 미군의 사용권 주장때문에 부대가 이전한 지 2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다.

<미군은 미군기지를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은 미군의 기지, 시설 사용에 기한을 두지 않고 미군이 무기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체제하에서는 미군 공여지는 미군이 무기한으로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

III. 미군 공여지로 인한 피해 사례

1. 동두천 석목마을에 대한 미8군 사격장 확장

- 미8군에서는 기존부터 사용중인 1993년경 폐쇄조치하여 탱크 보관소 및 탄약 저장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 지난 '96년 3월 바로 위 다른 장소인 광암동 83-1번지 일대(석목마을)에 사격장을 신설하려고 하자 주민들은 주민 생활 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들어 반대하고 있음

1) 동두천 석목 마을의 지역 특성

- 석목 마을 11세대 42명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 동두천시에서는 6km가량 떨어진 본 마을은 물이 맑고 자연 경관이 수려하여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 사격장 위치는 위 주민들의 유일한 주요 통행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음

2) 사건의 발단

- 쇠목 마을의 김병규(41. 농업)씨가 주택(60평 규모)을 짓기 위해 쇠목리 86번지 자신의 소유지에 대해 동두천시에 주택건축 허가신청을 했는데, 동두천시에서 검토 결과 미군 공여지로 밝혀져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이때부터 미군 공여지 문제가 등장.
- 96년 3월 15일, 미군당국이 아무런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쇠목 마을에 탱크 8대를 배치하였고, 이는 미8군 사격장을 새로 확장하기 위해 미군들이 땅 확보의 의미에서 배치된 것으로 추정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
- 미8군의 사격장 확장 계획이 밝혀지면서, 사격장 부지로 선정돼 조상대대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쇠목마을 주민들의 항의와 투쟁 시작

3) 문제점

- ① 미8군 사격장 확장 계획에 따라 대상이 된 쇠목마을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 살아온 자신들의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빠져 있다. 미군당국은 사전 협의나 손해배상도 전혀 언급없이 '미군 공여지'임을 주장하며 사격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고, 쇠목 마을 주민들은 본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토지가 공여지 인지도 또한 그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 ② 현재 탱크가 배치 되어있는 토지(광암동 83-1, 1,015m)는 이갑순씨등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
- ③ 사격장이 설치되면 유탄이 날아 (마을이 사격장에서 약 700미터 거리를 두고 산이 갈로막고 있으나 과거에도 유탄이 날아온 적이 있음)들어 주민들이 공포속에 시달리게 됨
- ④ 96년 4월 23일 미2사단 사격장 산불참사로 7명의 한국인들이 희생된 사건에서 보듯이 유탄의 불씨가 산불을 수시로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⑤ 사격장이 유일한 통행로인 주요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주민 통행 제한이불가피하고 주민들의 급한 용무와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원활히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이 있음

4) 진행 경과

- 96. 3. 15 미8군에서 기관총 사격 목표를 설치 (탱크 8대)
- 96. 3. 16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주민 통행 불편을 이유로 반대 서명 운동
- 96. 3. 18 지역 주민 6명이 미군 차량 2대와 귀대하는 미군을 저지하면서 대치

- 96. 3. 20 미2사단 행정 부사단장실에서 시의원, 주민 대표와 모임을 가졌으나 서로의 의견만을 교환하고 회의 종결
- 96. 3. 21 미2사단 행정 부사단장 현지 답사
- 96. 3. 22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장교 현지 답사
- 96. 4. 3 미2사단 행정 부사단장 명의로 3.20.회의와 현지 답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내옴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둘째, 공정한 해결을 보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
셋째, 한국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들의 노력의 진전에 대해 계속 알려드리겠음
- 96. 4. 4 미2사단측의 4.3답변에 만족치 못한 주민 대표들은 미2여단 정문 및 사격장 신설 현장에 반대 구호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차량 및 경운기를 이용 미2여단 후문에서 문제 해결까지 철야농성기로 결성
- 96. 4. 4 사격장 신설 반대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국방부, 미2사단에 발송
- 96. 4. 5 사격장 신설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 대책위원장 김병규 외 10명
- 96. 4.23. 국방부, 동두천시에 공문을 보내 석목마을 등 6천 4백여평의 주민 시설물에 대해 미 8군 사격장 건설을 위해 조속히 철거하도록 지시
- 96. 4.27. 주민대책위원회, 동두천 시민회 등 회원 70여명이 사격장 확장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미2사단 정문앞에서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임
- 96. 5. 2. 국방부 석목 마을 사태에 조사차 현지 방문 (예정)
- * 96년 4월 17일부터 석목 마을 주민들, 무기한 항의 농성 및 범시민 서명운동 (동두천 터미널 인근 농협 앞)
- * 매일 낮 12시: 미2사단 정문앞에서 농성

2. 국제 케미칼 공장 건설 중단 사례

* 진상 조사가 끝나지 않아 확인된 사실만 기록함 (곧 보충하겠음)

- 국제 케미칼(대표: 이신연)은 피혁원단 가공 공장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두천시 미2사단 인근에 95년 3월 완공예정으로 공장을 건축했다. (미군 탄약고로부터 30여m 떨어진 지점)

- 7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95년 2월 돌연 국방부로부터 건물 철거지시가 내려와 공사 중단

- 국방부의 철거 지시는 미군당국의 항의에 의해 비롯된 것임 (미군당국은 공장부지가 미군 공여지이고, 자신들의 규정에는 탄약고 300m 이내에는 민간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며 국방부에 항의함)

- 동두천시에서는 중재안으로 1안) 공장주가 자비로 방어벽을 설치하는 안, 2안) 문제가 되는 탄약고는 이동식 탄약고니까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안(참고로 미2사단의 규모는 250만평이다)을 제시했으나, 2가지 안 모두 미군당국에 의해 거부됨

- 이해 당사자 간의 입장

- 미군 당국 : 공장부지는 미군 공여지 이므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
폭발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장 건설 절대 불가
- 국방부 : 무조건 철거
- 동두천시 : 적법한 건축 허가이므로 강제 철거는 곤란, 적법한 보상후에나 철거 가능
국방부의 압력에 의해 건물주에게 자진철거 명령
- 국제케미칼 : 건축허가를 받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최근 국제 케미칼 측은 공여지책으로 공장을 살리기 위해 국방부 등에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로 "언제라도 미군당국이 요구하면 즉각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서야, 공장 건설을 진행시키게 되었음

- 국제 케미칼은 1년여동안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외국 바이어들과의 계약이 파기되고, 기술자들이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공장가동 역시 미군당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라도 철거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3. 동두천 생연동의 기형적인 3층 건물

* 진상 조사가 끝나지 않아 확인된 사실만 기록함 (곧 보충하겠음)

- 동두천시 생연동의 땅 소유주가 95년 6월 3층 건물을 짓기 위해 동두천시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있었음.

- 그런데 건축 부지 위로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고압 동력선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미군이 항의하자, 95년 9월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짐

- 결국 건물주는 공여지책으로 원래의 설계와는 달리 고압 동력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2층으로 변경, 기형적인 건물이 됨

- 미군이 사용하는 전선만 지나가도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히고 있는 실정임.

주한미군과 동두천

동두천민주시민회 사무국장 강 홍구

올해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지 50년이 된다. 주한미군은 1945년 일본패망 직후 첫 발을 내딛어 한국전을 치렀고 종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계속 주둔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 96(95년 국방백서)개의 미군기지와 3만 7천여명의 병력(육군-27000여명, 공군-9500여명, 해군-400여명, 해병-500여명)이 머무르고 있다.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동두천미2사단, 부산하야리아기지, 오산7공군기지 등 전국 곳곳에 주요도시 중심에 산재한 크고 작은 미군기지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남한 전체면적(3백억평)의 0.33%에 해당하는 1억평(7만3천에이커)에 달해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한국정부(국방부)가 갖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와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 제 2조부터 5조의 기지와 시설을 규정)를 갖고 있다. 즉 미국정부는 기지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오히려 '국가안보'라는 명목아래 주둔비용을 한국정부가 연간 약 30억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이나 불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접어두고라도 해방직후와 전쟁후 그리고 50년이 지난 현재의 변화된 시대상황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직후 전국 곳곳에 미군의 편리대로 세워진 기지의 대부분이 이젠 경제발전으로 산업화한 현대 도시의 중심에 자리잡아 흉물스런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미 보병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이다.

동두천은 원래 양주군 이담면이었으나 한일합방(1910년)이후 지금의 이름인 동두천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주둔하기 이전에는 이담면의 중심 생활권은 기차역(지금의 동안역-1912년 7월 25일 동두천역으로 개통되어 오다가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활중심이 생연동으로 바뀌면서 1984년 2월 14일 동안역으로 개칭하고 어수동역이 지금의 동두천역으로 바뀌었다.)을 중심으로 즉, 지금의 보산동을 중심으로 형성하며 살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재배 작물은 벼, 조, 콩, 팥, 수수 등의 소작인이었다.

그러나 미군의 의해서 강제적으로 터무니없는 토지보상을 받고 동두천 원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삶의 터전을 등지고 이주를 해야했다. 또한 미 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부근에 형성되었던 시장이 송내리 부근으로 이전하였고 그 이후 현 공설시장의 위치에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서 휴전 직후의 동두천은 공설시장으로부터 현재의 터미널 부근까지로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었고, 그러던 것이 점차 기타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결국 동두천 원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미군에게 삶의 터를 빼앗기고 타향살이가 아닌 타향살이를 하며 가슴에 민족의恨을 갖고 살아야만 했다.

동두천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형학적으로 서울에서 가깝고 38선 경계 부근(북위 37 58 9)에 위치함에 따라 군사적 요충지로 전략하여 미군이 51년 7월부터 주둔하기 시작했고, 최초에는 미군휴양소가 먼저 있었고(2-3개월간), 그후에 7사단, 3사단 61연대(중남미계 미국인 부대), 25사단 24연대(흑인부대) 등이 주둔하였다. 여타의 부대는 휴전성립 이후 철수하였으나 7사단은 계속 남았다가 70년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71년 기존의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보병 2사단이 대신 그곳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동두천에 동북아에서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라는 미 보병 제 2사단이 이전해 와 지금의 동두천 미군기지(6개의 캠프-약 250만평))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남한내의 미군기지의 주둔지역을 보면 대다수 지리적,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동두천 미군기지도 말할 필요가 없다. 保山里라는 말 그대로 山이 보호한다는 지형에 미군은 원주민을 내쫓고 기지를 주둔시킨 것인데, 군사전문가가 아니라도 미 2사단 기지가 얼마나 좋은 천혜 조건을 갖춘 기지인지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두천은 미군이 근 반세기를 주둔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으며 제 2의 예속의 길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 걸어 온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에게는 이중적 고통으로 작용하고 지역발전의 중대한 장애물로 존재하는 미군기지에 대한 이전이나 반환의 문제를 동두천의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하게 된 것이다.

* 다음주에는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현황과 동두천 미군기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20	80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우리는 아무 대안 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를 시외곽이나 시골로 이전하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미군기지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만은 안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징수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미군이 현재 안 쓰고 있는 기지를 당장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은 필리핀이나 호주처럼 하자는 것이다.
 아니, 최소한 오키나와처럼이라도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말도 듣는다.
 그들은 분단되지도 않았고, 동족끼리 전쟁을 한 경험도 없다는 것이다.
 맞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르다.
 유럽에서 전범국인 독일을 나눠 가진 승전국들이
 아시아에서는 역시 전범국인 일본을 나눠 갖지 않고 우리나라를 나눠 가졌다.
 승전국 미국의 감시를 받는 전범국 일본의 미군기지도 임대기간과 임대료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기한이다. 통일후에도 주둔하겠단다. 아니, 주둔해야 된단다.
 그러나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다.
 독도가 우리땅인 것처럼, 미군기지도 분명 우리땅이다.
 불났을 때 꺼주고, 도둑도 지켜주는 일은 분명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가 집에 들어와 엄마나, 아내나, 딸을 겁탈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등 온갖 미군범죄! 공짜로 쓰는 1억평의 미군기지!
 그런 미군기지를 우리가 필요해서 잠깐이라도 사용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것도 이따금씩 인상해 주어야 한다.
 공짜로 집 한 채를 빌려 주었다가, 방 한 칸이 필요해서 쓰자니까 방세를 내라는 격이다.
 땅주인도 모르게 국가가 미군에게 쓰라고 준 땅이 시 전체 면적의 51%가 넘는 곳도 있다.
 길도 못내고, 도시개발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곳은 너무나 많다.
 소음과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고생하는 주민도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도 말 한 마디 못한다. 이래서는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엄연한 독립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미군기지 반환 운동”이나 “미군기지 되찾기”라고도 부른다.
 전국에는 96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그 가운데 11 지역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그 11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 운동 지도자들과
 미군기지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애쓰는 녹색환경운동의 지도자들,
 미군범죄를 뿌리뽑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민운동
 의 지도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이름하여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
 이 이름으로 우리는 주인된 권리의 극히 일부분을 되찾았다.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 만세!

1997년 8월 22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

진정서

미군기지로 더 이상 피해를 받기 싫다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군기지의 주둔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미군헬기장의 소음으로 상당수의 주민들은 난청과 이명현상을 보이고 있고, 갓난 아기는 헬기소리에 경기를 일으키고, 헬기 프로펠라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기와장이 부서지고 가옥이 손괴되며, 통신두절이 된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생활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주 일어나는 미군범죄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으며, 심지어 지난 96년에 일어난 미군용 헬기의 민가추락사건 등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가에 어느날 갑자기 헬기가 떨어진다는것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고도 없이 밤낮 행해지는 비행훈련으로 잠을 설치고, 이에 참다못한 주민들은 미군기지안으로 들어가 강력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군사시설 무단침입이라는 차가운 말만 되돌아 올 뿐 조금도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서에 잡혀들어가 다시는 이같은 우발적 행동을 하지않겠다는 각서만 쓴채 힘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군사시설에 무단침입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가 정도는 귀 기울여 주는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습니까? 매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 행사때마다 터지는 축포소리는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평소에도 헬기 소음에 시달리고, 군사훈련중에 발사되는 빈번한 총소리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에게는 (미군들은 즐거운 날이될지 몰라도) 또 다른 생활의 불편을 안겨주는게 됩니다. 축포의 잔해가 불이 붙은채 마당으로 들어오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노인들은 커다란 축포소리에 놀라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굳이 남의 나라땅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국경일 행사를 요란하게 치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미군기지가 민간인 주거지역과 너무나 가까이 있기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군기지로 생기는 문제는 당장 1차적으로 피해를 받는 남구주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문제이며 국가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이미 30년전에 도로가 뚫려야 할 지역이 미군기지로 개설되지 못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일부분 구간을 뚫는데도 5년동안이나 미군과 협상을 해야되고, 그들의 요구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방음터널을 만들어 주고, 미군막사를 옮겨준 후에야 겨우 도로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세금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편의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세계에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에만 민간인 주거지역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주둔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국군도 군사보호지역의 상당부분을 해제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민간인 주거지역에 미군기지가 버젓이 있다는 것은, 안

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이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시도 아니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견딜 수 없는 것만큼의 피해를 뒤로 한 채 미군기지의 중요성만 이야기한다면 미군기지주둔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주민은 그 동안 너무나 오랜동안 고통을 감수해왔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만 겪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같이해야 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미군기지 인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통을 우리만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정부와 행정당국, 정치권에게 미군기지의 이전과 반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고 권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1998년 7월 31일

대구광역시 남구 A3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일동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번호
	B20	74

1996. 12. 5.

수신: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귀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
 발신: 녹색연합,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307호, 전화:744-1211)

머나먼 이국땅에서 다사다망한 공무에 여념이 없으신 귀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녹색연합'과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지난 10월 한달여에 걸쳐서 전국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연인원 1백여명이 동원된 부산, 대구, 동두천, 군산, 원주 등 전국 10개 지역의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미군기지 모두 소음, 수질, 토양 오염 상태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밖에도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는 귀국 군대의 레이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의정부에서 포항까지 450km에 걸쳐 있는 미군 송유관의 기름 유출,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와 영월군 상동면의 폭격장 피해, 귀화식물들로 인한 토종 식물군들의 피해 등 환경오염 실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생활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생태계까지 파괴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귀국 군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국 90여개 약 8천만평의 우리의 토지가 쓸모없는 땅이 되버리는 가공할 현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전세계인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우리 국민들의 문제일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우기 귀국의 병사들 또한 오염된 토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미군측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측면까지 있습니다. 이는 오염자가 복구를 부담한다는 국제 환경법상의 대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양국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는 단순히 형사관할권의 몇몇 조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 등 포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귀국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항의합니다. 더우기 세계 여러나라가 그러하듯이 귀국 역시 강력한 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 등의 미군기지에 대해 해마다 막대한 환경복구 비용을 미국 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더욱욱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방치한다면 대제앙을 부를 수 있으며, 이는 한미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이 귀하를 비롯한 귀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귀국 군대에 의한 환경오염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s)에 따라 한국 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귀국 정부가 여러해 전에 한국 내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미국은 미국의 국민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mental Policy Acts)에 따라 미군기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 미군기지의 각종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 미국은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 우리는 이번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조사권, 미국의 환경과피에 대한 복구 의무, 환경오염 복구비 적립 의무 등 구체적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1. 우리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 귀국과 한국정부 그리고 우리와 공동으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의에 대해 과거처럼 회피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귀국의 '정보자유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귀국 정부에 직접 항의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자세만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진지한 검토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약 귀하가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우리와 대화와 토론을 갖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용할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1996년 12월 5일

녹색연합 /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전국 공동대책위 준비모임 소속 단체: 우리땅 용산미군기지 되찾기 서울시민모임(준), 동두천민주시민회,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회의, 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 우리땅 하야리아 등 되찾기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우리땅 부평 미군부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 군산연합, 원주민주청년회, 하남통일을 여는 사람들, 포항민주청년회,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등록번호	자료번호
	B20	88

<5.14 기념 한일 공동 성명>

우리는 미군 기지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7년 5월 14일, 오늘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임대기간 종료일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기지에는 임대 기간이 없다. 우리는 임대 기간이 끝난 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정당한 주장과, 주한미군기지 임대기간 설정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요구를 모아, 오키나와와 한국의 미군기지 주둔 지역 곳곳에서 이 공동 성명을 동시에 발표한다.

오키나와는 지난 1972년 미군 지배를 벗어나 일본에 복귀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지주들과 5-10년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조건을 합의해 임대한 뒤, 미군 기지로 제임대에 왔다. 그 기간은 몇 차례 연장되었으나 때로는 돌려 받아 민간 공항이나 미술관, 지방자치단체 청사, 사탕수수 밭 등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일명 '코끼리 우리'라 불리는 미군 통신시설의 경우, 지주가 연장을 거부하여 미군기지의 불법 점거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된 경우도 있다. 어쨌든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은 오늘로 또 끝이 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반환 25주년 축하 잔치를 열기느커녕,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존속시키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개악하고 말았다. 이 특조법 개악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땅 도둑놈들!"이라며 항의하던 반전지주회 데류야 슈우덴 회장과 '코끼리 우리'의 주인 공 치바나 쇼우이치 씨는 일본 경찰에 체포 당하고 말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동은 오키나와 현민들이 아키히토 국왕과 하시모토 총리를 체포했다 석방한 것과 맞먹는 의미를 지니는 중대한 사태로 선언한다. 전범 국가 일본의 국왕과 자민당 연립 정권은 자신들의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 사과하기느커녕 침략 자체를 부인하고 '자위대'라는 이름의 침략군을 해외에 파병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시아인들은 천황 국가 일본이 다시 세계 침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히 항의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오키나와의 현민들은 일본 정부의 호전적 태도를 비난하고, 아시아 침략 사과와 전후 배상,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와 사과와 배상, 천황제 폐지, 자위대 해외 파병 반대, 일미 안보 조약 파기, 평화 헌법 고수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아시아인, 나아가 세계인은 오키나와 현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강력한 국제 연대를 통해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진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오늘 이 공동 성명 발표는 세계 평화 운동사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한다.

열화우라늄탄이나 실탄 사격 훈련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모든 군사 기지는 지역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평상시에는 전쟁 준비용일 뿐이며, 전쟁시에는 적군의 집중 폭격 목표일 뿐이다. 우리는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그날까지 강력한 국제 연대를 이루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1. 미국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의 사유지 강탈, 인권유린, 살인, 강도, 강간, 환경파괴 등에 대해 주둔국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축소 반환하라!

1. '특조법'은 위헌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반전지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군용지 강제 사용을 위한 '특조법'을 즉각 파기하고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에 반환하라!

1.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국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 등을 개정하여 미군기지의 임대기간을 확정하라!

1. 우리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의 축소,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시아와 세계 평화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국제 연대를 강화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97년 5월 14일

5.14. 기념 한일 공동 행동 참가자 일동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	번호
	B20	944

성명서

우리는 일방적인 미군기지이전 협상중단에 반대한다

지난 6월 18일자 지역 일간지에 실린 미군기지 이전협상 중단이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내용인 즉 미군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이전협상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의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결렬되면서 대구의 미군기지 이전도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썼던 우리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우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가옥이 부서지고, 기왓장이 날아가고, 밤낮 가리지 않는 헬기훈련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는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진행되어 왔던 A3 비행장의 이전협상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품어왔던게 사실이다. 미군기지가 이전만 된다면 이제껏 우리가 받아왔던 고통들은 모두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했다. 비록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살면 몇 년이나 더 살겠는가? 다만 미군기지가 이전되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고통을 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터져나온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중단이라니 도무치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각계각층들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기대를 가졌다. 돌아오는 것은 결국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 답변밖에 없었다. 매년 선거시기가 되면 모든 후보가 나와서 미군기지를 옮기겠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선된 자나, 낙선된 자나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행정당국도 마찬가지다. 우리주민은 수십차례 청와대에, 대구광역시와 구청에 서명을 하고 진정서를 보냈지만 그때 뿐이었다. 우리들의 생활적 고통은 해결될 조짐도, 해결된 예도 없다. 모두다 자기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일이라는 말들뿐이다.

수십년을 참아왔지만, 우리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고통받는 것은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이며 우리 후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비록 힘없는 주민들이지만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할 방법들이 없다. 지역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정치인이나, 행정당국에 기댈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직접 발벗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다.

정부와 행정당국,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주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애절한지 한 번 더 생각하여야만 할 것이다.

1998년 7월 31일

미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정당성

보 도 자 료

인원 자료실		
등록인	기류기	...
	B20	30

1997. 1. 20.

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귀하
 발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분량: 총 2 쪽

제목: 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 소송에 관한 건.

1. 오늘(1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이명옥 외 16인) 등은 국가를 상대로 1974년 국방부의 징발조치로 수용되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장좌리 일대의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 (소유권이전등기정구의 소)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 장주영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상 필요하다고하여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한국정부는 물론 주한미군에서도 부동산들을 군사상의 목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답의 경우에는 관할 한국군 부대로부터 국유재산사용승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급하며 경작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와같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주민들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징발이 1974년도에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 시기가 전시,사변,비상사태 였는가라는 징발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실사 징발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하였다면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사상 필요하다고 징발한 땅을 원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경작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 문제와 국가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귀 언론사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연락처: 581-9411, 588-9274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장주영)

• 별첨 자료 : 사건 개요 (별지 참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상임대표: 전우섭(田禹燮) 목사

<사건 개요>

경기도 파주시(구 파주군) 적성면 장좌리 주민들의 환매 요구

-- 국가가 징발하여 미군에 공여, 그러나 미군들은 거의 사용 안하면서 사용권 보유 --

한국전쟁 과정에서 피난을 갔던 장좌리 주민들은 휴전후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일대가 군 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출입을 금지 당한 채 인근 장좌리 등에 살게 되었다. 이때부터 1973년까지 주민들은 어렵사리 출입증을 발급받아 장좌리 자신들의 농토에 농사를 짓고 살았다.(낮에만 출입이 가능했고, 상황에 따라 전면 통제되는 경우도 있었음)

그러던 것이 1973-4년에 걸친 한국정부의 징발조치로 주민들은 장좌리 전체(약 40만평)의 땅을 징발당했다. 당국은 일방적으로 장좌리 주민들에게 재산 매수 통지서를 발부(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당시 시가의 3분의 1도 안되는 값(평당 270원)에 그것도 10년 상환 보상증권으로 강제 매수해버렸다. 바로 이렇게 징발된 토지를 국방부는 미군에게 공여하였다.

1973년은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 7사단이 철수하고, 파주에 있던 미 2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하던 상황으로, 당시 미군의 요청으로 미 2사단이 주둔하던 파주 일대의 땅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됨. 주민들에 따르면 73년 징발조치 이전에 민간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시킨 채 미군이 훈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며, 징발 후에도 얼마간은 미군이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미군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현재 장좌리에는 미군 기지나 상주 병력은 없고, 한국군 2개 대대 병력이 장좌리 일부에 기지를 두고 있다 함.

이렇게 해서 토지를 사실상 강제로 빼앗기게 된 주민들은 인근 장좌리 등지에 모여 살고 있는데, 80년대 초부터는 한국군 관리부대에 임대료를 내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이와같이 군부대에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야 말로 징발된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불요불급한 군사용지를 해제시켜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93년 12월 국회에서 83년말 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국가의 환매통지가 없어 환매권이 소멸된 징발재산에 대해서 피징발자가 95년말까지 환매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통과 시킴.) 이에 따라 주민들은 73,4년 징발된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진정을 국방부에 냈으나, 국방부의 회신은 그 지역이 미군에게 공여되었기 때문에 미군이 반환하지 않으면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 옴. (유사한 내용의 진정과 회신이 여러차례 반복됨. 최근 국방부는 미군의 반환하더라도 국방부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때에만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 추가)

문제점 1. 1974년 당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가?

징발법 제1조는 징발이 가능한 상황을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1974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문제점 2. 설사 징발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혹은 적법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소시효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미군 환경오염 반년 실태 기사>

미군기지 오염 사각지대

보사·국방위 "납 최고 24배·카드뮴 7배" 조사결과 공개 한-미협정 방지규정 없어 속수무책...불평등 개정 절실

주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국내에서도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재역할을 못하고 있는 '한미환경분과위원회' 그리고 정부의 지지세가 결핍됨에 따라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폐회된 입사국회에서 보사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철수기지 등 일부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실태를 잇달아 공개하고 환경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보사위의 의사 출신 안문희 의원(민주)은 50년대부터 미군의 유류저장시설로 이용되다가 지난 92년 5-7월 한국군에 인계된 3곳의 기지가 일반지역보다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7배나 오염돼 있다는 국립환경연구원 의 최근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농경지에도 기름띠 흔적

특히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는 땅 속 깊은 곳까지 유류로 오염돼 있었고, 근처 농경지에도 기름띠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곳은 37개(개당 저장용량 31만 갤런)의 유류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조선에서 공급받은 유류를 저장에 매설된 송유관을 통해 각각의 주한미군기지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번 입사국회에서 K-55기지 문제를 추궁한 정성 출신의 임복진 의원(민주)은 "평택군이 지난해 8월 K-55부대 사령관에게 오염대책을 요구했으나,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오염수처리시설 추가 건설 비용 1백20억원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며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해 평택군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송탄 K-55공군기지의 경우 하루 5천ℓ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능력이 3천4백ℓ에 불과해 기준치의 2배인 122ppm의 하수가 흘러들어 20ha의 주변 농지 피해와 생태계의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와 함께 미군부대



지난해 11월 필리핀 환경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철수기지에 버린 유해폐기물을 가져가라고 시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군기지 토양오염문제가 두나라 사이에 한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닐라/AP 연합뉴스

레이더기지는 번안기 등 전기 장비의 절연체로 쓰이는 병독성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이 1천1 기량 배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반복돼 있던 미군기지 오염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지난 92년 11월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한국 등 해외주둔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보도하면서부터이다.

이 보도 직후 환경처는 미8군 사령관에게 환경오염 실태 파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난산 끝에 지난해 7월 한미합동위원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됐으나 10월에 상계례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후속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과위 있으나

게다가 이 위원회의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역할을 양국 정부에 대한 '권고'나 '조언'으로 제한하고 있고, 오염 실태 등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의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분과위원회의 설립 근거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67년 제정)은 4조에서 "미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대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환경 오염에 대한 완벽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뒤치다꺼리는 한국이

또 이 협정 6조는 "합중국 군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수·동산·하수오물처리 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한미군의 하수·폐기물 등 뒤치다꺼리를 한국 정부가 떠맡도록 하는 등 엄청난 불평등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전국 38곳에 흩어져 있는 주한미군 기지가 갖가지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점적체적으로 미군기지의 연료공급용 송유관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도해 국내에서도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역이 상당 부분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집지는 지난 91년 미국 회계감사원이 한국-일본-필리핀-독일 등 10개 해외 주둔기지를 조사해 7개 기지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비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미 국방부는 앞으로 20년 동안 2백50억달러를 들여 미국 내 군사기지의 오염을 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2곳의 폐기물처리장 주변 오염 정화와 공군기지 송유관에서 유출된 기름을 정화하는 데 각각 2천2백만달러와 1천9백30만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전혀 정화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8군사령부 짐 폴스 대령은 "폴리염화비페닐은 안전한 유해물질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영국에 보내 1백기를 처리한 바도 있다"며 "K-55기지의 문제 등 한국 또는 미국의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부 기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개선 노력을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신동호 기자

인권 자료실	
분류기호	자료번호
	35

美軍하수처리장 악취 "民怨"

부평에 악취
 H. P. 4. 12 (28)
 부평구 부평동 주민들 100여 명이 악취를 내는 하수처리장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다. 악취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를 없애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악취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를 없애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악취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를 없애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전 연구 목살... 고통 심각

전국 100여 개 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목살의 위험성이 밝혀졌다. 목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목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목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목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타임캡슐광장 명소화소 확정

定都600년사업
 서울시는 11일 서울定都600년 기념 타임캡슐광장의 명소화를 위한 현상공모작 심사결과 **李鐘祥**씨(46·송파구 석촌동 52·이태아건축연구소)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갑도합조>
 또 **康賢祐**씨(29·부산 선대신동·부산환경설계연구소) 등 2명의 응모작이 우수작으로 뽑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우수작의 제안내용을 골격으로 우수작의 아이디어를 일부 참조해 타임캡슐매설장소인 중구 필동 옛 수방사부지 5백여평의 명소화 방안을 확정, 다음달 중 영사외 물어가 定都600년이 되는 날인 11월 29일 완공할 계획이다.
 최우수작은 우주운선의 별 화구에서 착상한 직경 30m, 깊이 16m의 원형광장을 중앙에 치, 장구한 타임캡슐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볼레에 12개의 기둥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 은행나무를 배치해 시간의 순환성과 장구함을 강조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또 북극마르가 그려진 동심원판석에는 세계 각국언어로 타임캡슐의 내용을 새겨놓고 전망대와 포석정과 같은 전통적선앙식의 광장진입로와 벤치가 설치될 예정이다. 【**鄭盛權**기자】

李鐘祥씨 최우수작 당선

전국 100여 개 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목살의 위험성이 밝혀졌다. 목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목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목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목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미군부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98. 3. 19 4페이지

8개 건설업체 입건 조사

속보=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군 제2사단의 영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부기 혐의를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18일 구동 벽산 신성 한진 등 8개 국내 건설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미군 구동공병대와 수의계약물 맞고 군 영내에서 채유관·마사 등의 공사를 했던 14개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이들 8개 업체가 동두천시에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또 전날 '수사보강'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미군 시

설공병대 한국인 군속반장 이영해씨 외에도 환경과장 이어무께씨 등과 일 부 미군장교가 불법매립을 묵인하거나 동조했을 것으로 보고 18일 미8군쪽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자체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미 행정합정 주한 환경본부와 위원회 존 앤드슨 부위원장은 17일 '문제의 건축폐기물은 미군 것이 아니 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미군 쪽의 건축폐기물로 판명된다면 한-미 행정합정 제3조와 주한미군환경기준 에 따라 미군쪽에 폐기물 불법매립 투 기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점성암 기지

미군 폐기물매립' 규탄시위
북측연합과 주한미군법적근절운동
본부 회원 40여명은 20일 낮 12시계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 앞에서 경기도
동두천 미2사단의 건축폐기물 영내 불
법매립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미군 폐기물매립' 규탄시위

북측연합과 주한미군법적근절운동
본부 회원 40여명은 20일 낮 12시계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 앞에서 경기도
동두천 미2사단의 건축폐기물 영내 불
법매립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2사단이 부대 안의 야산
과 하천에 페아스콘 등 환경오염을 일
으키는 건축폐기물 수십만을 불법으
로 묻거나 버렸다"며 "현재 치외법권
지역인 미군 영내에서의 환경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권 기자

98.11.21. 21. 21. 21

술모도 "수출물
1. 수출물
2. 수출물
3. 수출물
4. 수출물
5. 수출물
6. 수출물
7. 수출물
8. 수출물
9. 수출물
10. 수출물
11. 수출물
12. 수출물
13. 수출물
14. 수출물
15. 수출물
16. 수출물
17. 수출물
18. 수출물
19. 수출물
20. 수출물
21. 수출물
22. 수출물
23. 수출물
24. 수출물
25. 수출물
26. 수출물
27. 수출물
28. 수출물
29. 수출물
30. 수출물
31. 수출물
32. 수출물
33. 수출물
34. 수출물
35. 수출물
36. 수출물
37. 수출물
38. 수출물
39. 수출물
40. 수출물
41. 수출물
42. 수출물
43. 수출물
44. 수출물
45. 수출물
46. 수출물
47. 수출물
48. 수출물
49. 수출물
50. 수출물
51. 수출물
52. 수출물
53. 수출물
54. 수출물
55. 수출물
56. 수출물
57. 수출물
58. 수출물
59. 수출물
60. 수출물
61. 수출물
62. 수출물
63. 수출물
64. 수출물
65. 수출물
66. 수출물
67. 수출물
68. 수출물
69. 수출물
70. 수출물
71. 수출물
72. 수출물
73. 수출물
74. 수출물
75. 수출물
76. 수출물
77. 수출물
78. 수출물
79. 수출물
80. 수출물
81. 수출물
82. 수출물
83. 수출물
84. 수출물
85. 수출물
86. 수출물
87. 수출물
88. 수출물
89. 수출물
90. 수출물
91. 수출물
92. 수출물
93. 수출물
94. 수출물
95. 수출물
96. 수출물
97. 수출물
98. 수출물
99. 수출물
100. 수출물

미군 폐기물매립' 규탄시위
북측연합과 주한미군법적근절운동
본부 회원 40여명은 20일 낮 12시계
서울 용산구 미8군 기지 앞에서 경기도
동두천 미2사단의 건축폐기물 영내 불
법매립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2사단이 부대 안의 야산
과 하천에 페아스콘 등 환경오염을 일
으키는 건축폐기물 수십만을 불법으
로 묻거나 버렸다"며 "현재 치외법권
지역인 미군 영내에서의 환경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권 기자
98.11.21. 21. 21. 21

미군사격장 폭음피해 첫 손매소

98. 3. 2. 사격장 회성 인근주민 국가 상대

국내 처음으로 미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폭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 '쿠니 사격장 미공군 폭음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민구·42)는 지난달 28일 국가를 상대로 미공군의 폭음에 따른 주민 15명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주민 1인당 100만원씩 1500만원의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회성/홍용덕 기자 냈다.

'준비된' 항공권은 싸대기

이리저리 따져보고
미리 준비한 항공권,
IMF 사태를 맞아셔도
더욱 든든합니다.

IMF형 할인항공권

안겨레투어21

문의전화: 7100-770

97 1/10 환경계

사업장 37% 유해물질 위험

전국 8천4백여업체 기준치 넘는 유해인자 노출

노동부 전국작업환경 측정

전국 사업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유기용제 등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만2천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37.6%인 8천4백22곳에서 3만1천4백85건의 유해인자 노출 기준 초과가 적발됐다.

특히 태광실업이 디클로로메탄 기준치(50ppm)의 3.8배인 188.75ppm으로 초과된 것을 비롯해 34개 업체는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넘어섰다.

자동차업종 도장부서의 경우 25곳 중 7곳 23개 공정에 걸쳐 기준치 이

상의 유기용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3백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8백92곳 가운데 11%인 98곳이 혼합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에 오염됐다.

기준치 초과 유형별로는 소음·분진 등 물리적 유해인자가 92.8%, 벤젠·포름알데히드·납 등 유해 화학물질이 7.2%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환·배기장치 및 방음시설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업체에 종업원 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오룡 기자

전문대 경쟁률 치솟을듯

철도 17대1...마감하루전 명지등 인기과 15대1

철도전문대가 8일 전국 1백54개 전문대 가운데 처음으로 97학년도 신입생 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전형 경쟁률 17대 1을 기록하는 등 접수 초반부터 전문대에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전문대 입시에서는 1만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복수 지원해 96학년도 5.1 대 1 수준을 웃도는 사상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9일 철도전문대에 따르면 일반전형의 경우 1백28명 모집에 2천1백83명이 지원해 17대 1, 특별전형은 1백12

이와 함께 10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명지전문대, 인덕전문대 등도 접수 마감일 하루 앞두고 전자계산 등 일부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5대 1 수준을 넘어서는 등 전체 경쟁률이 5~7대 1 수준을 기록했다. 강세준 기자

외부 광고물에 지방세

앞으로는 대형 건물의 전광판과 옥상 광고물, 광고용탄 등 광고용 건축물에 지방세가 매겨진다.

내무부는 9일 자산가치가 있는 전광판과 옥상간판 등 광고물에 취득세 또

미군탱크 파주 농로진입 5억피해 끼쳐 주민반발

미군 탱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시공중인 농로 포장공사장에 진입해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도로를 파손해 5억여원의 피해를 입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파주농지개발조합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밤 미군 제2사단 소속 탱크들이 콘크리트 타설 뒤 굳어 가던 파주시 파평면 자장리 농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4.3km 구간이 파손돼 5억8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파주농지개발조합은 이 도로가 탱크작전용 도로가 아닌 농로이며, 당일 미군 탱크가 출입통제 표시를 무시하고 진입한 점을 들어 미군쪽에 피해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농조 관계자는 "미군 당국이 영문출입통제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나, 한글로 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장애물까지 설치했던 만큼 손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군쪽의 배상을 요구했다. 파주/권기식 기

김현옥 전 서울시장 별세

서울시장과 내무부장관을 지낸 김현옥(71·부산 장안중 교장)씨가 9일 오후 7시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김씨는 육사3기 출신으로 부산시장,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05년 미서브

11/19
한겨레

□ '미군공여지 해제 논란' 동두천 표정

결림돌 사라져 도시개발 부푼 기대

610만평중 상당부분 도심위치... 투기·땅값폭등 걱정도

경기 동두천시에서 요구한 미군 공여지 해제문제가 오는 13-14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해결점을 찾게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게 일고 있다. 반면에 도시개발로 명값이 폭등하거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기형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대재머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방부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내 7개동에 흩어져있는 미군 공여지 가운데 43%인 610만여평이 올해 안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여지는 지난 67년 2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이곳에 주둔하는 미군

에게 작전목적으로 주어졌던 것으로, 그동안 건물의 신축과 증·개축은 물론 농·사용시설물 설치에도 일일이 미군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공여지 문제의 공론화 계기는 이른바 '쇠목마을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군은 지난해 4월 광암동 83-1 일대에 중화기 자격장을 새로 만들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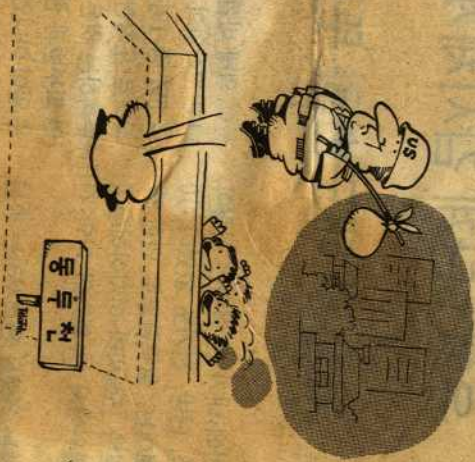
이번에 공여지 해제 대상이 된 지역은 부대시설이 없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땅으로 상당부분이 도심 인근지역에 있어 개발촉진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동안 재신권 행사

를 제한당했던 토지소유주의 개발욕구와 투기를 노리는 외지인들의 속셈이 맞아 떨어질 경우 땅값폭등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또 공여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해제된 지역에 주택과 공장, 음식점 등이 마구 들어설 경우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운영우 동두천시 부시장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제가 공식 확정될 경우 상세 도시계획을 세워 대규모 공영개발을 하는 한편 숙박시설과 음식점, 공장 등의



설립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여지 해제가 따른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여지로 묶여 있는 땅 가운데 상당부분이 탐동계곡 주변 등 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아 숙박, 유흥업소의 난립에 따른 환경파괴가 예상된다. 이는 권익식 기자



‘쿠니사격장’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89년 3월 주민들은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수개월 동안 벌이기도 했으나 8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사격장이 이전되지 않고 있다.

91 11/11 534대

□ 화성 미공군 ‘쿠니사격장’

45년간 끊이지 않은 폭음등 피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대 750만평에 위치한 미국 제7공군의 ‘쿠니사격장’은 지난 45년간 유탄과 소음 피해로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과 마찰을 빚어온 대표적 사격장 중 하나다.

지난 52년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사격장이 들어선 뒤 이곳은 토·일요일을 빼고 매일 미군 전투기들의 기총사격과 폭탄 투하훈련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번에 3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실시하는 훈련에는 전투기 1대가 보통 기총사격과 폭탄투하를 각각 6차례씩 하며, 이런 편대 사격훈련이 하루 30~40여차례씩 계속된다.

이 때문에 쿠니사격장 주변의 매향·석천·이화리 9개 마을 720여가구 주민 3500여명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폭음과 불발탄 폭발사고로 슬한 피해를 입어왔다.

올해에만 인근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에 불발탄이 날아드는 등 2차례 오폭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5년간 어린이와 임산부 등 10여명이 죽고 15명이 다쳤으며 재산피해는 정확한 집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유로 주민들의 사격장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올해 1월 사격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곳 ‘미공군 폭격 소음공해 대책위원회’ 전만규(41) 위원장은 “주민들이 수시로 자신의 논밭과 어장을 돌봐야 하는데 과연 5km 떨어진 집단 이주단지에서 생업유지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물고, “국방부 이주대책은 주민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조사해 주민 한명당 1천만원씩 모두 3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이제 이곳 사격장 문제는 법정으로까지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용덕 기자

91 11/11

□ 인터뷰/ 비암리 반

“사격장 확장 인근주민 지

“사격장이 들어선 뒤부터 소음과 먼지 등 각종 공해는 물론 오발사고에 의한 생명의 위협까지 견뎌내야 하는 이증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의 ‘비암리 사격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비암리장 서현석(37·사진) 씨는 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 81년 군부대가 비암리에 10만평 규모의 사격장을 만든 뒤 포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2번이나 발생했다”며 “군부대의 안전대책이 고작 사격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포탄이 떨어진 홍죽리의 경

91 11/11 534대

□ “민원 최소화

“이전문제등 대 남비현상 민원

군당국은 사격장과 훈련장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모두 69차례의 민원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 사격장과 훈련장 이전 요구가 38회로 42.1%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각종 훈련으로 인한 소음·먼지·진동 피해 △기존 훈련장 이전 뒤 땅값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지역 이기주의로 훈련장 신설에 부정적 반응 등

장애아동들 “학교 가고 싶어요”

11.30	1982	1901	11.30	1901	1901
13.8			13.8		
888	1050	888	700	888	110

군산 미군기지 배출 오폐수 허용치 넘는데도 규제 못해

4.28.20 (19)

군산 미공군기지가 하루 3천~4천t의 생활하수를 배출허용치를 크게 초과해 흘러보내고 있으나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안에는 골프장과 병원시설, 항공기 및 차량 정비시설 등 국내 업체의 경우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각종 배출시설이 많아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께 미군기지 4곳의 오수정화시설 가운데 3곳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를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크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오폐수처리시설 부근의 경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84.6ppm으로 기준치(10)를 8배 이상 초과했고 정문 근처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295.3ppm으로 일반 오폐수정화시설 기준치(60)를 5배 정도 넘어섰다. 이밖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도 104~313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기지 안 4곳의 오폐수 정화시설이 낡고 오래돼 제거할 수 없는 바람에 오폐수가 서해 앞바다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미군 당국에 협조요청을 보내 구두로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을 뿐 별다른 규제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임석규 기자